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문화국장
제출연월일	2022. 10. 6.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55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에서 명시된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 나. 필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 명시를 지양하고, 위원회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명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명칭변경함.
- 나.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명칭변경하고 필수업무에 대한 정의를 ‘대면업무’로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업종 명시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 안 제2조 제2호 및 제4호)
- 다.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가 포함된 기본계획수립은 재난 발생 시에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6조)
- 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논산시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22. 9. 1. ~ 2022. 9. 21.(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일선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2조제2호 “필수업종이란”을 “필수업무란”으로, “대면업무를 동반하여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을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를”로 하며 제4조 “필수업종으로”를 “필수업무로”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8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13조제3항, 제14조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부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투자유치과장	김 영 민
	기업유치팀장	주 성 철
	담 당 자	전 종 훈 (746-60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u>일선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u>필수업종</u>”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u>대면업무를 동반하여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u></p> <p>3. “<u>필수노동자</u>”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4. “<u>대면업무</u>”란 <u>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u></p>	<p><u>논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필수업무 종사자</u>----- ----- -----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필수업무</u>”란 ----- ----- ----- ----- <u>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를</u> ----- -----.</p> <p>3. “<u>필수업무 종사자</u>”----- ----- -----.</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필수노동자</u>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u>필수업무 종사자</u> ----- -----.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u>필수업종</u> 으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업종 지정일자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 있는 <u>필수노동자</u> 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 ----- ----- <u>필수업무로</u> ----- ----- ----- ----- <u>필수업무 종사자</u> ----- -----.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u>필수노동자</u>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 <u>필수업무 종사자</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u>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u>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u>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u></p> <p>2. <u>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u></p> <p>3. <u>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u></p> <p>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생략)</p> <p>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u>필수노동자</u>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u>필수노동자</u> 지원을 위한 재화 제공</p> <p>2. <u>필수노동자</u> 보호를 위한 재화</p>	<p>1. <u>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u></p> <p>2. <u>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u></p> <p>3. <u>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u></p> <p>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사업) --- <u>필수업무 종사자</u> ----- -----.</p> <p>1. <u>필수업무 종사자</u> ----- ---</p> <p>2. <u>필수업무 종사자</u> -----</p>

현행	개정안
또는 서비스 제공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u>필수노동자</u>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논산시 필수노동자</u>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u>필수업무 종사자</u> ----- -----) ----- ----- <u>필수업무 종사자</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u>필수노동자</u>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 <u>필수업무 종사자</u> -----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u>부시장</u> 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u>시장</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u>부시장</u>	1. <u>시장</u>
2. <u>필수노동자</u> 보호 및 지원업무 부서장	2. <u>필수업무 종사자</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필수노동자</u>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u>필수업무 종사자</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u>필수노동자</u>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④ (생략)</p> <p>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u>필수노동자</u>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③ ----- -----<u>필수업무 종사자</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협력체계 구축) ----- ----- <u>필수업무 종사자</u> ----- ----- ----- -----.</p>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 당 없 음

나. 추계결과

○ 해 당 없 음

3. 작성자

투자유치과장 김 영 민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